

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 73 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	제출년월일	2019. 2. 12.
위 원 회	행정복지위원회	전 문 위 원	심 경 석

I. 제안내용

1. 제안이유

- 여성의 보건 위생물품 지원 및 공공시설 비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안 제3조 제2항, 제6조제4항, 제7조, 제20조제1항, 제38조, 제39조)
- 나. 상위법(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개정사항 반영
(안 제18조,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 다.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제출 관련 근거규정 반영(안 제19조제1항)
- 라. 여성 보건위생 물품 지원 근거 조항 신설(안 제31조의2)
- 마. 양성평등주간행사 관련 근거 규정(시행령) 추가(안 제35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양성평등기본법」

나. 예산조치 : 추경 예산편성 예정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19.1.9. ~ 2019.1.29.(20일간)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및 의견없음

II.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가임기 여성의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하고 긴급한 경우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의 건강증진과 생활상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 지난 2016년 ‘깎창 생리대’ 논란 이후 서울시를 포함한 10여개 지자체에서 자체사업으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였고,
- 2017. 12. 12일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을 통해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가임기 여성에 대한 생리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임.

○ 주요 개정내용은

- 안 제18조, 안 제19조제2항, 안 제22조제1항에서는 「양성평등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거법령의 명칭 및 용어를 개정하였고,
- 안 제31조의2에서는 구청장은 가임기 여성의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현행 상위 법령에서는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대 지원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가임기 여성에 대한 생리대 지원 관련 규정은 없음.
-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살펴보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제2호의 라목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생리대 지원의 경우도 일종의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는 예외적으로 기부행위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가임기 여성의 보건위생 물품 지원 조례 개정 현황

- 「양성평등 조례」 일부개정 : 서울시(2017.9.), 강남구·구로구(2018.12.)
-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 도봉구(2018.7.)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였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으로

- 본 개정조례안은 가임기 여성의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의 지원과 긴급한 경우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성들의 건강권 증진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사업은 무차원적인 생리대 무상 지원이 아니라 긴급한 경우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 시행 시 목적과 범위를 넘어서 무분별한 생리대 남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에 대한 합리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됨.

Ⅲ. 참고자료

1. 관계법규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성별영향평가)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별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 ② 성별영향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8. 3. 27.>
[제목개정 2018. 3. 27.]

제16조(성인지 예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건강증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8조(여성의 날과 양성평등주간)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개정 2018. 3. 2.>

[제목개정 2018. 3. 2.]

제42조(기금의 설치 등)

-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③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양성평등주간 행사)

- ① 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은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지방외계법」

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2018. 3. 27.>
[제목개정 2018. 3. 2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2.>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 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